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세계화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근의 전세계적 경제 위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경제는 더 이상 국지적 경제체제가 아니다. 가히 지구촌이라 할 만하다. 이는 교통·통신·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시장 개방과 유학생수 증가, 외국인 학생의 유입 등 교육의 세계화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체제는 이러한 흐름에 수세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수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화 중심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 평택시로서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과 국내·외 교육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평택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미래의 한국사회

인구, 사회·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전망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측면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학습인구 구조 변화

이미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경제, 문화, 복지 등과 연관된 중층적이고 상호 연계된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 경제 역동성 및 사회적 활력 저해, 연금·의료 관련 사회 비용의 증가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표 1> 세계 및 한국의 인구구조 및 중위연령(Median age) 추이

연도	세 계				한 국			
	인구구성비(%)			중위 연령(세)	인구구성비(%)			중위 연령(세)
	0-14	15-64	65+		0-14	15-64	65+	
1960	36.8	57.8	5.3	23.2	42.3	54.8	2.9	19.0
1970	37.4	57.2	5.5	22.2	42.5	54.4	3.1	18.5
1980	35.1	58.9	5.9	23.1	34.0	62.2	3.8	21.8
1990	32.4	61.4	6.2	24.6	25.6	69.3	5.1	27.0
2000	30.0	63.0	6.9	26.8	21.1	71.7	7.2	31.8
2005	28.2	64.5	7.4	28.1	19.1	71.8	9.1	34.8
2010	26.8	65.5	7.7	29.3	16.3	72.8	10.9	37.9
2020	25.1	65.5	9.4	31.6	12.6	71.7	15.7	43.7
2030	23.0	65.2	11.8	34.0	11.2	64.7	24.1	49.0
2050	20.2	63.7	16.1	37.8	9.0	53.7	37.3	56.2

자료 : UN(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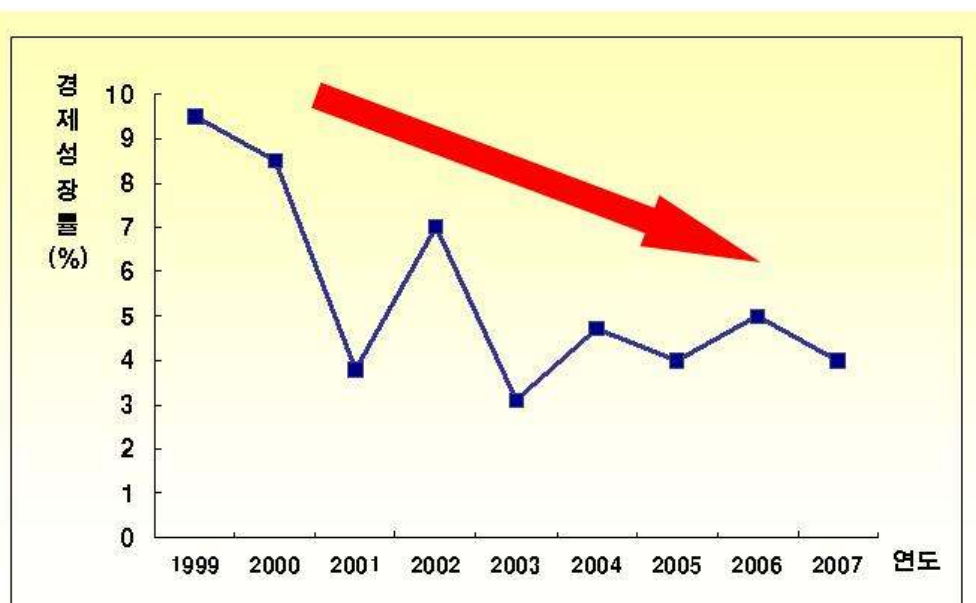
“미래한국리포트(2000)”에 소개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생산인구의 급감으로 20년 뒤면 사실상 한 사람이 벌여 한 사람을 부양하고 수입의 절반이 각종 세금과 사회 보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초부담(super-burden society)' 사회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유희 인력의 활용 및 인적 자원의 질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시스템이 재편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교원 수급, 학교 수급,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 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측되는 미래사회의 인구분포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하려면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이희수 외, 2007).

2. 사회·경제적 측면

□ 경제적 저성장에 따른 성장둔화의 우려

미래에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라는 탓에 갇힌 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성숙기 발전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생산성 주도 성장을 위한 기술역량 및 제도적 기반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2007)

□ 가속화되는 국제경쟁의 세계화

세계화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교류의 범위와 내용이 변화하면서 국가 간의 무한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 혹은 기업 간의 국경을 넘는 경쟁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화가 가져온 변화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혹은 국제적 표준화의 확대이다. 결국 일국(一國)적 차원 혹은 단일 경제체제에서의 기준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표준화를 강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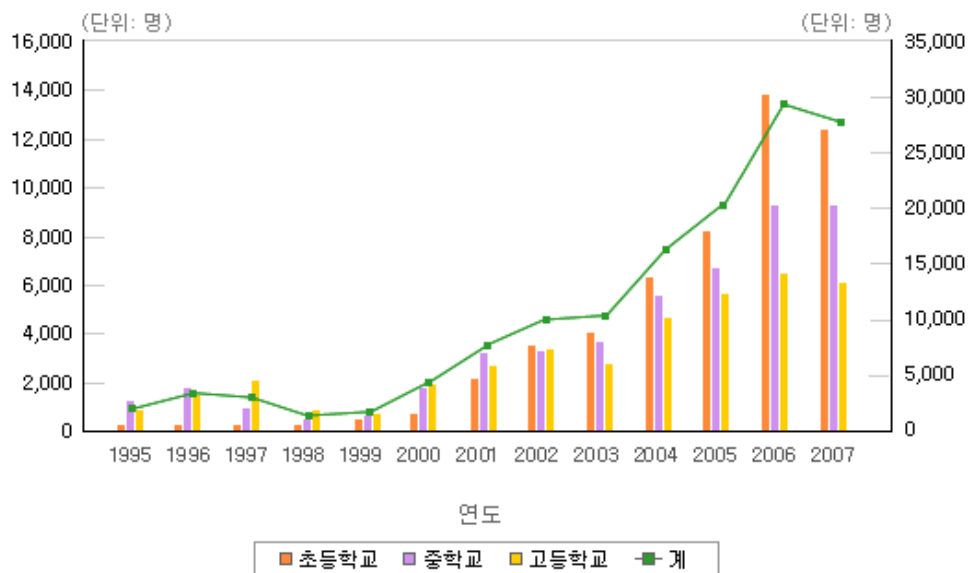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한 국제적 표준화 시도 및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생학업능력 검사인 TIMMS(미국주도)나 PISA (OECD주도)의 기본 전제는 국가경쟁력의 척도를 국가 내부의 인적 자본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은 준립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2007)에 의하면 초·중·고 초기 유학생은 2000년 4,397명에서 2003년 10,498명, 2007년 27,668명으로 7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대학 이상의 해외 유학생은 2001년 149,333명에서 2004년 187,683명, 2007년 현재 217,959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결과 유학수지 적자는 2001년 10억 7,000만 달러에서 2004년 24억 8,700만 달러, 2005년 33억 8,090달러, 2006년 44억 5,79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 상반기 기준 23억 9,350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때 교육수지에 관한 한 한국은 마이너스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의 시장경쟁 논리가 유입되고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경제에서의 생존을 위한 국가경쟁력 혹은 성장동력산업 창출에 국가정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불평등이나 사회적 포용을 지향하는 정책보다 수월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 나타나게 된다.

연도별 조기유학 현황



주 : 1) 당해년도 3. 1 부터 다음해 2. 28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 파견동행, 해외 이주는 제외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

[그림 2]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 추이

□ 사회적 양극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절대빈곤층이 증가했으며 사회양극화의 개선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97년 이후 소득 분배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해소의 척도인 사회적 이동이 점점 경직화되고 있다. 수도권인 인구구성비는

2005년 48.2%에서 2010년 49.8%, 2030년 54.1%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및 지역(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사교육 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07)”에 의하면 소득수준 하위 30%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79.3%, 66.3%, 40.5%로 크게 떨어진 반면 소득수준 상위 10%에서는 초·중·고 각각 94.5%, 91.8%, 90.7%로 큰 차이가 없다. 소득계층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보더라도 소득수준 하위 30%에서는 100만원 이하가 55.4%로 가장 많은 반면, 상위 10%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9%가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교육양극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문화적 측면

□ 직업생활, 가치의 다원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한국 사회는 후기 근대 사회로 진화하면서 획일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근대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 사회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게 되며 사회문화 가치의 개방화와 유연화가 새로운 한국적 패러다임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경제개방의 가속화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생산 및 소비양식의 증가로 인해 직업의 불안정성 및 탈직장화 현상이 증폭되고 시간제 및 계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양식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교육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환경 및 인간관계에 적합한 보상체제를 현실화해야 하며 그 대상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학습-일-여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방적 교육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 및 과학기술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직업 교육의 현장 적합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 지식기반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속화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간의 의사소통 등 사회관계 패러다임과 조직 구성의 질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화가 정착기를 넘어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개인과 집단들이 전통적인 여론주도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공공정책 관련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방식이 개방형 혹은 쌍방향 관리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활용한 교육콘텐츠의 혁신적 변화가 예측되며 이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 특히 입시문제나 폭력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시기 및 확산시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그 파급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과 현실 참여의식의 증대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제반 정보의 공개화와 투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이희수 외, 2007).

4. 과학기술적 측면

□ 과학기술의 첨단화

나노공학(Nano Technology), 생명공학(Bio Technology),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인지과학(Cognitive Technology), 합성생물학(Synthetic Bio Technology) 등을 통합한 개념인 NBICS 등 첨단기술이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든지 세계의 최신 정보와 지식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재능을 테스트하고 보완해주는 인터페이스나 시뮬레이션이 개발되어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유비쿼터스개념의 도입으로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등 서비스간의 상호결합은 네트워크의 융합을 촉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되는 것으로 인해 생활방식에 따라 각 분야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융합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및 성인 학습자들이 필요한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학습형태 및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진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표 2> 산업기술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이전	향후
기술/제품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	불확실
시장	선진국을 통해 검증	잠재적으로 존재
기술이전	해외 기술도입 상대적으로 용이	직접 도입이 매우 어려움
기업전략 및 경쟁원천	해외기술 모방 및 개량 요소투입 증대를 통한 대량생산	전략적 신기술 개발 기술혁신 촉진
정부정책	전통적 산업육성정책	미래전략산업·제품·기술개발정책
경제·사회 환경	빠른 경제성장 사회적 니즈 상대적 단순	상대적으로 느린 경제성장 사회적 니즈 다원화/복잡 고령화 및 이공계 기피심화 지역균형발전 등 분배요구 증대
주력 인력	저임금 단순근로자, 기능인 → 테크니션 → 엔지니어	고임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국가혁신시스템	기술학습·개량형	기술창출·혁신형

출처: 조현대 외(2004)

II. 외국의 교육개혁 동향

외국의 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핀란드, 싱가포르, 홍콩은 안정된 경제구조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 수학, 과학 영역의 국제성취도비교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1990년대부터 각국은 지식기반경제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싱가포르는 1997년에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를 국가의 교육비전과 전략으로 설정하였고, 홍콩의 교육개혁위원회(Education Commission)는 2000년에 “삶을 위한 학습과 삶 속에서의 학습(Learning for Life, Learning through Life)”이란 제목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

하였고, 핀란드는 2003년에 “교육전략 2015(Ministry of Education Strategy 2015)”를 발표하였다.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이다.

1) 교육 세계화 정책의 배경

싱가포르는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한 동남아시아의 소규모국가로서 국토 면적이 서울보다 약간 큰 692.7km²이며 인구도 2008년 현재 460만여명에 불과하다. 본도와 63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도는 동서로 42km, 남북으로 23km에 이르는 작은 땅이다. 적도와 가까워서 연중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은 편으로 평균기온은 26.8%이다(<http://www.mfa.gov.sg/seoul>).

물리적 조건을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에 49,700달러(한국은 24,800달러)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 싱가포르 대통령인 리완유의 지도 하에 다민족, 다언어를 통합화하고 열악한 물리적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국토도 작고 인적·물적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통제 체제를 통해 국민간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체제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한 정책의 기조는 바로 국가 전체의 세계화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에 영어공용어화가 한 몫을 했다. 중국인이 76.8%, 말레이인이 13.9%, 인도인이 7.9% 등으로 영어권과 거리가 멀지만 과감하게 영어를 공용어화한 것은 국가의 통합성과 아울러 개방화에 매우 유리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의 세계화 정책

1965년 독립 이후 싱가포르는 민족간 갈등해소와 양적 팽창기(1959~1965년), 국가건설과 질적 통합기(1965~1978년), 새 교육제도 수립과 효율성 추구기(1979~1989년), 수월성 지향기(1990년 이후)를 거쳐(유현숙 외, 2004: 25), 오늘날에는 가히 ‘교육 세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개방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6년에 12개 중학교 교장들이 미국과 영국의 25개 학교들을 돌아본 후 ‘학교에서의 수월성을 위하여(Towards Excellence in School)’라는 보고서를 제출(유현숙 외, 2004: 25)하였는데 현재의 학력인정제도는 영국의 그것(학교급별 졸업자격시험제도 등)과 매우 흡사하다. 이것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교육세계화는 외국 교육제도의 도입과 개방, 교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3) 교육 세계화의 목적과 전략

싱가포르의 교육세계화 정책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세계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세계화 그 자체를 하나의 경제적 투자영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싱가포르 교육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국제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가) 교육의 개방화

싱가포르의 교육세계화 정책은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그 자녀들의 교육여건이라고 하는 정주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의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싱가포르교육부에서는 외국계학교(foreign system schools)라 하여 내국학교와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외국인 및 내국인을 위해서 설립·운영하는 ‘다국적 학교’와 싱가포르한국학교와 같이 외국의 학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민족계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홍영란 외(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싱가포르의 외국계학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내국학교인 앵글로중국학교(Anglo-Chinese School)와 화청학원(Hwa Chong Institution)은 2005년부터, 성조셉학원(St Joseph's Institution)은 2007년부터 사립계열의 국제학교를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립국제학교의 경우 교육부에 사립학교로 등록하고 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선단체법(Charity Act)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영리법인도 설립가능하다. 이 경우 학비에는 물품서비스세 7%가 포함된다. 내국학교 부설 국제학교의 경우 이중언어정책과 국가교육 등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사립국제학교는 IB 프로그램이나 자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력은 인정되고, 대학입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개의 내국학교 부설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립국제학교에서도 한쪽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와 3년 이상 해외교육 이수자인 경우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학교 신규 설립시 정부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Overseas Foreign School의 경우 약 144,000M2(약 43,600평)를 100년간 임대받고 있다. 이는 일반 내국인학교의 3배 면적에 2배의 기간에 해당되는 파격적인 우대조건이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교육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외국계의 국제적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 교육의 산업화

싱가포르의 교육세계화 정책은 교육을 경제적 투자대상으로 보고 싱가포르를 아시아교육메카로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을 산업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양한 국제적 학교를 유치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 등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싱가포르의 국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교육이 경제적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교육개발위원회(EDB)는 싱가포르에 유명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형태의 다양한 대학교와 중등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재완, 2006: 8). 2005년말 현재 싱가포르에 진출한 세계 주요대학은 12개에 이른다. 이외에도 런던 패션전문대학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전문직업양성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치된 외국 대학 분교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단, 학비는 모교가 위치한 본국수준의 등록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립중등교육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이중언어교육과 윤리교육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 재량권이 허용되어 있다.

교육부문에서 2005년말 현재 유럽최고의 경영대학원인 INSEAD를 비롯 MIT, 존스홉킨스, 조지아 공대등 12개의 세계 최고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외국대학 유치를 위하여 캠퍼스 부지 알선,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실송금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Insead를 유치하기 위하여 30년간 캠퍼스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4년간 연구비의 50%를 제공하였으며, 재정보증도 대행하였다. 또한 MIT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에는 7년 동안 2억 싱가포르 달러(약 1,400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WCU 추진 결과, 자국 학생의 해외유학이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5만명 정도로 1998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05: 8-9).

다) 교육수준의 국제화

싱가포르의 교육세계화 정책은 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 예컨대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그 교육적 수준이라는 것이 학업성취도와 같은 학력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도 있지만 그를 위한 시설·교원·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준제고를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 국민들의 99%가 자국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대학예비학교(한국의 고등학교)와 초등교육의 우수성을 꼽고 있으며, 국제화에 부응하는 우수한 교육체계 하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국립 싱가포르대학(세계대학 순위 33위, 2007년 영국 더타임즈), 난양기술대학(세계대학 순위 69위, 2007년 영국 더타임즈), 그리고 80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 중 1/5 이상이 아이비리그에 진학(2005. 7. 15 매일경제신문)하는 래플스 주니어칼리지가 그 증거들이다(구자역, 2007: 102).

요컨대, 싱가포르의 교육세계화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주여건의 하나로서 교육조건의 세계화, 그리고 교육을 투자대상으로 보는 교육의 산업화 기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세계화를 그 기조로 삼고 있다.

2. 홍콩

1997년 중국으로의 반환 후 중국과 영국의 국제조약에 의하여 홍콩은 2047년까지 법률, 경찰, 통화, 관세, 이민정책, 외교업무 등에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08년의 홍콩 인구는 6,985,200명이다. 인구의 95%는 중국인이다. 1인당 GDP는 구매력환산지수로 41,614달러로 세계 6위이다. 영국 식민지의 경험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반환 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교수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학교나 일부 자유허교 등에서 영어를 교수언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식 학제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6-3-3-4체제로 전환 중에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부터 학교별 입시가 있었으나,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1990년대 말과 근래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입시를 폐지하였다. 교육허브를 모토로 다 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이종재 외, 2008).

1990년대 이후로 홍콩 정부는 학교경영방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분권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와 자율학교지원제도 (Direct Subsidy Scheme)가 그것이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학생에 대한 책무의 확보, 학교간 경험의 공유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자율학교 지원제도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학교에 교육과정, 납입금, 입학시험 등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도 1991년에 도입되었다.

홍콩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는 1984년부터 1997년까지 7차의 보고서 발행하였으며, 1차부터 6차까지의 접근은 교육문제에 대한 하향식 접근 모델이었으나, 7차 보고서는 학교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중심 및 상향식 접근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7차 보고서의 핵심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관리 체제 (mechanism for quality assurance and school effectiveness)이다. 질 관리제도 (quality assurance framework)는 학교의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과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학교평가(quality assurance inspection)는 학교의 자기평가와 외부평가단의 평가를 통해서 상호 협력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영국식 학제는 2006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중국 및 우리나라와 같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바뀌고, 홍콩교육인증시험 및 홍콩상위수준시험 등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졸업시에 홍콩중등교육자격시험(Hong Kong Diploma in Secondary Education)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학제 변경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홍콩은 산업으로서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 홍콩정부는 시정연설에서 12년 무상교육 실시(2008-09학년부터) 및 소규모 학급 운영(2009-10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등의 교육투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홍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의 축(Education Hub)으로서의 홍콩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축으로서의 홍콩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학교의 확대를 위해 학교신설부지 알선 및 재정지원, 기존학교의 국제학교 전환을 지원한다. 둘째, 외국으로부터 유능한 학생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 정원의 확대, 외국학생에 대한 취업규제완화, 장학금 지원에 힘쓴다. 셋째, 외국학생의 활용의 활용을 위해 이민국의 허가없이 학기중 시간제 취업 및 방학중 정규취업 가능, 졸업 후 홍콩에서의 구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넷째, 유능한 외국 인재의 유치를 위해서 연령 및 다른 조건을 완화한다.

3. 핀란드

핀란드는 2007년 현재 핀란드의 인구는 530만 명이다. 1인당 GDP는 구매력환산 지수로 40,197달러로 세계 12위이다. 핀란드의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이다. 핀란드는 UN의 인간개발지수에서 세계 12위, 세계에서 6번째로 행복한 국가이며, 시민의 자유권, 언론의 자유, 반부패지수, 정치적 권리 등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꼽히고 있다.

핀란드는 구독일교육체제를 따르고 있다. 중학교 졸업이후에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이들간의 교류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직업교육을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취업을 하거나 직업전문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정규 인문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렵다. 인문학교 졸업 후에는 국가차원의 대학입학시험을 치른다. 대학들이 시험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모든 핀란드의 대학들은 국립이다. 2006년 현재 중학교 졸업자의 93%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중학교 졸업자의 51%는 인문계열의 학교에 진학하며, 40%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약 7%는 상위단계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17%는 직업전문대학(polytechnic)으로, 20.5%는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며, 약 58%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진학하지 않는다.

2003년 PISA에서 15세 핀란드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문제해결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세계경제력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핀란드를 고등교육의 진학률과 질 부분에서 1위, 수학 및 과학교육분야에서 2위로 평가하였다. 핀란드 교육정책의 특징과 핵심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종재 외, 2008).

4) 교육정책의 특징

핀란드는 교육을 통해 1950년대 농경산업사회로부터 지식경제의 모델이 되는 국가로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장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핀란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기존의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나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핀란드의 교육체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가치와 공유된 비전에 토대하여 지속 가능한 리더십에 의해 구축되어 왔다. 다른 나라들이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인 교육의 표준화, 읽기·쓰기·계산 능력 등에 대한 강조, 학교에 대한 결과적 책무성 등을 강조한 반면, 핀란드는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느슨한 표준, 창의성을 동반한 폭넓은 학습, 전문성의 신뢰에 터한 지성적인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의 혁신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정보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에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교수 학습을 강조하고 이와 동일한 정도로 개인의 인성, 창의성, 지식 및 기능의 발달을 강조한다. 책무성과 관련하여서, 학생들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들이 발달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와 교장의 전문적 판단을 중시하는 교육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지성적인 책무성 정책을 채택하고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였다.

5) 핵심 교육전략

○ 교육 및 문화에서의 형평성 추구

핀란드는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 지역, 연령, 성별, 출신, 민족, 언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교육 및 문화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 정보통신기술 활용, 문화산업의 촉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추구 정책은 최근 산업화로 인해 생산, 인구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생기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핀란드는 교육과 문화의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적 성장 및 학습능력의 제고

인구노령화, 지식 중심의 업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요구 증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다양한 교육 내용, 건전한 학교 공동체 구축 및 참여, 삶 속에서의 학습, 비공식 교육과의 연계 등을 통해 폭 넓은 학습기회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 참여의 기회 확대

핀란드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에게 폭 넓은 선택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올바른 선택이 중요시되며 그릇된 선택은 소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봉사활동이 사회적 통합, 참여, 역량 계발 및 시민성 향상, 민주주의 체험, 정체성 확립, 삶의 경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핀란드는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량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기초교육에서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 및 체육활동 등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핀란드 사회의 교육, 문화,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지원

핀란드 사회의 교육, 문화,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식발달과 문화 및 정서적 발달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수를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핀란드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평가를 1999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학교들은 매년 각각의 프로그램 및 효과성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하고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평가의 주요 기준 및 내용은 교육부가 결정하며, 주요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는 교육부의 산하기관인 고등교육평가위원회(Higher Education Evaluation Council)에서 담당한다. 초·중등교육의 평가를 위해서 핀란드는 2003년 교육평가위원회(Council for Education Evaluation)를 신설하였다.

핀란드는 학교평가체제를 지식경영과 학습조직으로 연결시킨다. 학교평가를 통해서 개인 및 조직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학교 및 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육체제 전반의 지식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4. 중국

중국에서의 교육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80년대 개혁개방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교육문호를 개방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방은 2003년에 시행된 합작학교 설립조례와 2004년에 발효된 조례에 대한 시행방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2004년 당시 700여개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합작국가를 보면 미국이 154개교, 호주 146개교, 캐나다 74개교, 일본 58개교, 홍콩 56개교, 한국 12개교 등이다. 학교유형을 보면, 고등학교 40개교, 직업학교 69개교, 대학 151개교, 대학원 74개교 등이다(박재운 외, 2007:53-54).

중국은 특히 대학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른 각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교육분야도 본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일류수준 대학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인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학비를 받는 민영화, 시장화의 방향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이경자, 2006: 59-67).

5. 일본

일본은 지자체의 영어특구제도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평가·연구하는 기관은 없지만 지자체별 혹은 대학별로 영어교육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학생교육과 교원연수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토시 유·초·중 영어회화교육특구, 히라카타시 영어교육특구, 네야가와시 영어특구, 치바시 국제교육특구, 나루토시 교육대학 초등학교 영어교육센터 및 교원교육국제협력센터, 칸사이외대 교직원영어교육센터 등이 그 예이다.

지자체별로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영어교육과정의 운영 특례를 적용받아 탄력적이고 다양한 영어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영어수업시수를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등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보조교사에 해당하는 ‘영어지도강사’제도를 도입하여 원어민 영어지도강사 및 내국인 영어보조강사, 그리고 내국인 교사가 팀티칭을 이뤄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영어교육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국내의 교육환경

이미 많은 지역이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특구 등으로 지정되면서 교육국제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평택이 교육의 국제화를 진행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적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외국인학교 현황과 관련하여 평택의 국제적 교육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주 국제자유도시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1세기 제주의 비전은 지방화 시대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제주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1963년 처음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구상한 지 48년만인 2001년 12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7년이 지났지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틀의 부족, 세계화 인력·언어·교통 기반의 취약성,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정책적·법적 지원의 부족, 국내의 경쟁적 지역의 확산 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변화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법령으로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 외국대학 설립 자격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제주지역 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학교’ 지정 권한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외국인학교나 외국대학의 설립이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 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제주교육의 산업화 등 종래 국가 주도 교육정책에서 볼 수 없었던 정책들이 입안되었고 추진 중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대학의 설립, 교육의 산업화라 할 수 있는 실적도 역시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제정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전략 추진과 제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맞물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고등학교 관련 규정

제주특별법에 포함된 국제고등학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 설립·운영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이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세계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에서 “세계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보다 자유롭게 변경되었다.(법 제187조 제1항)

제주도에 설립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외국인 교원 임명과 외국인 학생 입학이 가능하고,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수업,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제21조(교원의 자격)·제23조(교육과정등)·제24조(수업등)·제26조

(학년제)·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제31조(학교회계의 설치) 및 제46조(수업년 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87조제2항).

셋째,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용 요건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보다 융통성 있게 변경되었다(법 제187조제3항).

넷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법 제187조 제4항).

다섯째,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87조 제5항).

여섯째, 법 제186조에 의한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87조 제6항).

일곱째,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자격증·교감자격증 및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다)의 자격이 없는 자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동법시행령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조기유학을 떠나는 국내 학생들을 제주로 유입하고 귀국학생을 수용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 성공의 조건은 내륙의 국제고와 차별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

제주특별법 중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182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에서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외국의 법령에 근거하

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 포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제주자치도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제주특별법 제182조 제2항에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고,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182조제6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동법 제182조 제3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도교육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넷째, 동법 제18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같은 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섯째, 동법 제188조제2항에서는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2009년 3월 25일 제주특별법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법 제189조의 2에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의 내용 중 영어교육도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89조의2)

둘째,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세계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법 제189조의4 제1항)

셋째, 국제학교는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법 제189조의4 제2항)

넷째,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법 제189조의6)

다섯째,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법 제189조의7)

여섯째,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 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89조의8)

일곱째,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89조의9)

여덟째,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89조의11) 동법 시행령 제35조의12(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서는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아홉째,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

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
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법 제189조의12)

2.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에서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 포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제정한 것이 바로 외국교육기관법이다.

3.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

외국교육기관법에는 부분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하며,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외국교육기관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내용

항목	법률	시행령
설립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함(제4조) 	
학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정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외국교육기관의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자 자의 학력을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제9조)
내국 인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제10조) - 외국거주에 따른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외국교육기관: 입학 당시 해당 외국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수(내국인 학생수 및 재학하는 학생수의 산정은 당시 입학하는 학생수를 포함한 수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0% 이내로, 위원회가 비율조정(제7조제3항제1호)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5% 이내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15% 이내로, 위원회가 비율조정(제7조제3항제2호)¹⁾ - 외국인학교: 30%이내.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20%이내 추가 상향 가능(제7조제4항)

1) 단, 2011년 12월 31일까지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최초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둠(제7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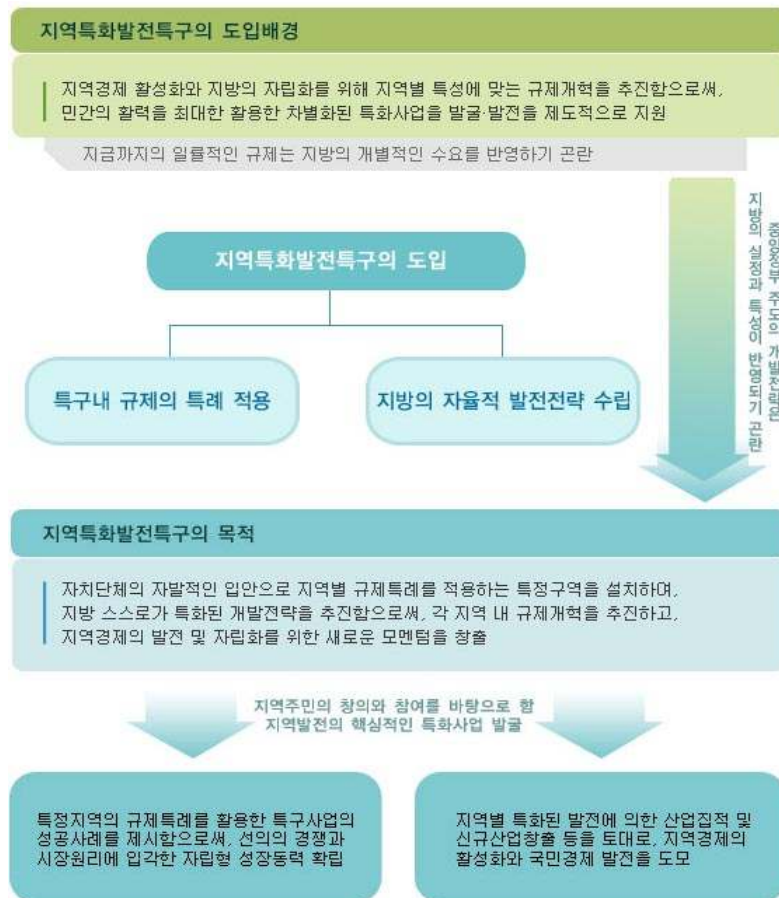
<표 4> 외국교육기관법 개정 연혁

개정 일자	조항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007. 5.25	제 2 조 의 2 (대 학 원 대 학 의 특 례) 신 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 주국제자유도시 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 여 건물의 일부를 교사(校舍)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대학 교사의 최소면적을 학생정원 200명 기준에서 100명 기준으로 완화함
2008. 10.20	제4조, 제7 조, 제8조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의 설립심사위원 회와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위원회’로 통 합함
2008. 10.24	제2조 (외 국 교육 기관 시 설 · 설 비 등 설 립 기 준)	종전에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게 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에 소규모 외국대학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 문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하는 외국 대학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외국대학의 유치를 활성화시키려 는 것임.
2009. 6.30	제7조(학생 의 정원) 제3항 내지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설립 및 학생유치를 위하여 일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입학생 포함)의 30%까지 허용 ○ 학교설립 및 학생유치를 위하여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5% 이내로 하되, 최초 5 년까지는 15%까지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설립승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까 지 학생정원의 30%까지 허용 ○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30%까지 허용하되, 교 육감이 20%까지 상향조정 가능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 법률은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
로, 정부가 주창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성장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 2003년 7월 1일 발효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소외된 여

타 지역에 대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림 II-2] 지역특구 도입 배경

출처: 지식경제부(2006)

가)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17조제1항 규제특례사항에 따르면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초·중등학교 외국인 교원 임용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교원 채용시 외국인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했으나, 특구법 제1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규제특례사항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초·중등학교에 외국인을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원어민교사 관련 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의 발급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통하여 신분 보증 및 고용기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특구법 제20조).

<표Ⅱ-2> 교육특구지정지역의 사업현황(2009. 7)

	특구 명칭	특화사업 내용
1차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영어학습센터 사업 -외국인교원·강사채용 -영어체험학습장
2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고교 외국인교사 배치 -영어체험캠프 운영 -사이버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교육여건 개선사업
3차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영어마을 운영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차상위계층 및 엘리트교육지원
6차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정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 -외국어 교육 강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지원 사업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의 질적향상 -거창 영어캠프 및 홈스테이 체험 공간을 운영 -군민영어학습센터
	김해 평생교육특구	-김해외국어고교 자율학교지정 -영어 교육 기회를 확대 -시민 평생교육원 및 김해평생교육도시의 운영
7차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강화 -관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외국어 교육 강화 계획
8차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및 외국어 국제관광 교육지원사업 -여수 에듀-파크 조성 -사이버 학습센터 구축
10차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U-Learning 포털 시스템 구축 -공원형 영어타운 EOZ 설치 -초중고교 외국인교원 10명 배치 -교육환경개선 지원
12차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외국인 및 국제화교육 강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 교과목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환경 조성사업

	특구 명칭	특화사업 내용
13차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교육사업 -외국인학교 및 충남외고 설립 -특성화중학교 설립 -초중고교 외국인교원(강사)배치 -영어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체험위주 캠프 운영
13차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평생교육 사업 -교육강화 사업
13차	서울 중구영어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영어교육강화사업 -영어교육 통합 학습시스템 구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14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 집중교육’: 초·중·고교에 원어민 강사 110명 지원, 4개 권역별 1개교씩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험형 외국어 교육’: 초·중학교 10개교 선정, 영어·일어·중국어를 휴무 토요일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영, 주 5일간 매주 30명씩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과 1회 300명씩 방학중 영어캠프 지속 -‘늘 배움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최신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시스템 가동, 모든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EBS 영어방송 활용 맞춤형 영어교육 추진 -‘일류교육도시 환경조성’: 각급 학교에 정보화사업, 도서관 확충 및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농촌지역 소재 43개교를 대상으로 영어 방과 후 학교,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운영
14차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배치, 영어타운 설치 등 외국어교육강화사업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유비쿼터스 평생교육, 광양 타임머니제도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사업
15차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국제학교설립 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원어민 지원 -영어마을 체험지원 -지역학교 육성 School -Up 결연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우수교사 인센티브제 실시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평생학습도시 시민 아카데미 사업
16차	충남 홍성·예산국제문화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305억원) -방과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 운영(63억원) -우수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 사업(61억원) -전문고의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운영(53억원) -대학 연계 ‘영어 및 중국어 캠프’ 운영지원(14억원)
17차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까지 초·중·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 -화상교육시스템구축을 통한 개인별 영어 구사능력 도모 -방학 중 통학형 영어마을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육체계 구축

IV. 결 론

1.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

미래의 사회변화와 교육의 변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는 미래의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역으로 교육은 사회변화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반영하여 평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래 사회의 변화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사회화와 교육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미래에는 사회적으로 정보기술이 더 진전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의 네트워크가 더 확장되고 교육에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학습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화에 따라 평생교육이 확대된다. 이미 한국사회는 1990년 이후 세계평균보다 중위연령이 더 높아졌으며, 2005년에는 총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9.1%로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이고,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 2030년대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교육이나 재취업교육 등 평생·직업교육의 폭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출산경향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교육여건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사회는 다원화되고 교육은 개별화를 지향한다. 개인들의 선호체계가 생존을 위한 것에서 여가를 위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곧 생산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 역시 전통적인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의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수요가 다원주의화되고 이는 학교에서도 개별화 교육 및 교육과정의 유연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세계화와 전문교육이 강화된다. 세계화는 특히 중국과의 경쟁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고급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외국인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해짐으로써 교육내용과 학제에 있어서도 세계적 경향에 따른 변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유목주의화가 진행되고 직업교육이 다변화된다. 4차, 5차산업까지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탈산업사회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동성이 강화되는 유목주의적 경향이 더 부각되고, 이에 따라 인력구조의 대변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기관은 더

이상 전통적 내용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아울러 학교의 틀에 한정되지 않고 직업교육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시민사회가 강화와 대안교육이 활성화된다.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사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시민교육과 공동체교육이 더 강화됨과 더불어 학교밖에서는 기존의 학교체제와 다른 대안학교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이러한 전망을 고려할 때 앞으로 평생 교육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로서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서 창의성과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국가간 교류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학교의 적극적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정주여건(외국인학교 등) 마련을 통한 외국인 유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제적 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 외국인 유치가 가능하려면 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학교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교육의 세계화 전략은 여러 측면으로, 예컨대 교육내용의 세계화, 국가간 교수·학생(학점) 교류 등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세계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하는 현재와 같은 모습은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국제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국제적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제고등학교 설립, 경제자유구역 외 교육특구의 국제적 학교 설립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나 인천 등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만 했지 국제적 형태의 학교를 직접 적극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예컨대 외국에서 유

치한 학교가 아니라 평택시가 설치하고 IB(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력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격적인 국제 학교 설립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위교육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지향하는 학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운영에 있어 단위학교에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구축 및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독립학교 및 자율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율학교모형, 아일랜드의 학교경영위원회 설치 및 교장 및 교직원 인사권의 단위학교 이양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은 학교평가체제의 구축, 평가결과의 공개, 우수사례의 보급 등과 같이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등의 국제적 학교(international school)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국인학교(local school)를 혁신해야 한다.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학교형태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교육수요자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배정방법을 개선하며, 학교에 대한 직접 규제를 최소화하되 평가 등의 사후통제를 통해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2002), 'WTO와 교육시장 개방'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2003), '전면교육 개방 저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2002), 'OECD/US 교육시장 개방 관련 Forum 출장보고'.

교육인적자원부(2003), '알기 쉬운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동법 시행령안'.

구자역 외(1999), 『세계의 교육 혁명』, 서울: 문음사.

김경원·임현진 공편(1995),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서울: 나남.

- 김병섭 외(2002),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도입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성기(2003),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2),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성기(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기(2005), "International Schools and Special District for Education", *Globalization & Education Reform*,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성기, 김익상, 하봉운, 이덕난(2008). 『제주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성기, 성열관(2005). 『미래 교육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 김용일(2000), 『위험한 실험』, 서울: 문음사.
- 김중섭(2003),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희오 외(1999), 『21세기 국제관계와 한반도』, 서울: 범학사.
- 남덕우 외(2003). 한국경제 생존프로젝트. 서울:삼성경제연구소.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인천광역시(2003),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민관합동WTO교육서비스협상협의회(2003), ‘2차 민관합민관합동WTO교육서비스 협상협의회 자료집’.
- 박영숙, 김성기, 박경준, 김진화, 김기수(2006).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박재운, 김성기, 황준성, 이덕난(2006).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운, 박찬주, 김성기, 하봉운, 양승실, 조진일, 황준성(2008). 『충남도청 신도시,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범국민교육연대(2004),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 국회 공청회’ 자료집.
- 부산국제고등학교(2002), 『부산국제고등학교 발전 기본계획안』.
- 성열관, 김성기, 하봉운, 유진호(2005).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병준 외(1999),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서울: 박영사.
- 왕한신(2004), ‘미국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 차터스쿨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논총』 23,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왕한신, 김성기, 박철희, 유진호(2004).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광역시 초·중등

교육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외교통상부(2003), 『WTO 이해하기』.

유현숙 외(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한국 교육개발원.

이상직·박기성(2003),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이시우, 김성기, 고전, 윤달원(2009). 『자율화와 다양화 실현을 위한 교육법령 개정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이종재, 허경철, 김성열, 천세영, 김병주, 김민호, 박종필, 김성기, 이광현, 김왕준 (2008). 『제주교육발전 기본방향과 전략적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종현·최정환(2003), 『인천 구도심지역의 재생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이희수, 김성기, 이해영, 정재창, 조순옥, 이민규, 최익선(2007). 『미래교육 정책 의 제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03),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운영’.

인천발전연구원(2003),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재정경제부(2003),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의 미래입니다’.

정문성(2003), ‘인천 교육의 현황’,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지역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 집.

조동섭, 김성기, 박철희, 윤홍주(2008). 『인천 교육비전 2020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석훈, 이용숙, 이한규, 서민원, 나민주(1999), 『외국인학교의 법적 편제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조현대, 윤문섭, 이공래, 민철구, 홍주봉, 김대경, 윤성식, 김선우(2004). 미래 국가 전략산업 육성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분석의 틀 구축 및 IT/BT 주요 사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돈민 외(2002), 『WTO 교육서비스 시장 협상에 대비한 성인교육 협상 전략과 발전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최진황, 박약우, 이완기, 이의갑, 김진석(2003),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계청(2004), <http://www.nso.go.kr>

하봉운, 김성기, 연문희, 김종호, 이율의, 성열관(2006).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연구 용역』, 군포시 수탁과제보고서

하봉운, 김성기, 연문희, 이율의, 김종호, 최운실, 이장익, 김주아, 성열관, 오상철, 김진곤(2006). 『2005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수탁과제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2004), <http://click.kdi.re.kr>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2002), 'WTO 교육개방협상의 현황 및 대책'

한진수(2004), '미국 초등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의 이해', 경인교대 『교육논총』 23
집.

홍영란, 김성기, 정영기, 송동섭(2007).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UNESCO(2004), Global Education Digest

<http://www.ibo.org/>